



공공부문 · 교사 · 공무원 노동자는  
청년 실업에 책임 없다

자본주의와 기업인들,  
또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다

임금피크제로 만들어지는 건  
생색내기용 극소수 열악한 일자리뿐

▶ 관련 기사 3, 4, 5, 12, 13, 16 면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현지 인터뷰  
“개혁이나 혁명이나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8~9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 주식시장 붕괴가  
의미하는 바

5 면

재벌 개혁이나  
재벌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나

6~7 면

남북 합의를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11 면

유럽연합의  
위선적 난민 정책

14~15 면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방해와 압박을 가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게 잔업과 특근을 통제하겠다고 협박하고 해고 위협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도 약 3조 원의 적자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했다.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와 조선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에게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지는 “귀족”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 위기 속에서 조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낮았다. 중소 조선소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도 많아졌다. 특히,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반면 조선소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익을 봤다. 단적으로 현대중공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3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실 소유주인 정몽준은 지난 4년 동안 주식 배당금으로 1천2백30억 원을 챙겼다.

## 사내하청 노동자들 동참시키려 노력해야

그럼에도 주요 조선소들은 뻔뻔하게도 올해 수조 원의 적자를 내세우며 임금 동결을 강요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중대재해 근절, 고용 안정 등을 내걸고 함께 싸우자며 일어섰다.

“그동안 우리는 따로 싸워서 각개격파 당했습니다. 중소 조선소 노동자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이제는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이번 공동 파업은 고통 전가에 맞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넘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연대 투쟁은 9월 17일 2차 공동 투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차 공동 파업은 1차보다 더 확대되고, 울산 조선노연 결의대회도 대규모로 열어 조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



사측의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9월 9일 공동 파업에 나선 조선 노동자들.

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9일 공동 파업에서 드러난 약점도 보완해야 한다. 이날 파업은 파업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 모든 조선소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참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내하청 노조와 함께 하청 노조 가입 운동을 다시 벌이기 시작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투쟁에 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해 승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을 더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김지태

## 4주째 전면 파업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오늘(11일)로 26일째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도 벌써 6일째다.

보수 언론과 정부, 재계는 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워크아웃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그만큼 임금이 회복되길 원한다. 5년간 빼앗긴 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어요. 월차도 없애고, 연차도 줄이고, 수당도 사라졌죠. 도급, 비정규직도 대거 늘었어요. 회사는 고통분담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고통을 우리에게 모두 떠넘겨 온 겁니다.”

4주 가까이 지속된 전면 파업은 사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측이 미리 쌓아 둔 재고가 줄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때문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생산 활동 방해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조합원들의 복귀를 종용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폐쇄는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예요. 회사가 조합원들의 복귀를 종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노조에서 하자고 하면, 끝까지 버틸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집회, 교육 등을 배치해서 대오의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파업을 하면 노조 간부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도 하고, 파업 대오가 공장 탈환 투쟁도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어렵습니다.”

직장폐쇄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장 점거로,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생산을 완전히 멈추게 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투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집중 포화 속에서도 3주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 지원을 보내자.

이재환

※ 기사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 “MBK는 고용 보장하라!”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계속 외면해 왔다.

홈플러스 대형마트 직영 노동자 1만 5천여 명 중 70퍼센트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이다. 협력업체의 파견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수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여성인 마트 노동자들은 매일 수십 내지 수백 개의 박스를 옮기고, 하루 종일 매장을 쉴 새 없이 이동한다. 노동자들은 “3~4년만 일하면 성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급여가 딸랑 시급 5천7백 원가량, 월급 1백10만 원가량이다. 정규직도 임금이 턱없이 낮다. 사측은 매각 직전까지 진행하던 임금협상에서 시급을 3백30원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버텼다.

노동자들은 이번 매각이 “최악의 먹튀 매각”이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에 인수된 것도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 최악의 먹튀 매각

MBK는 2013년 ING생명을 인수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하고는 5개월 만에 전체 직원의 30퍼센트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또 2008년 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을 인수한 후 지난해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지금 MBK는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고용안정 협약을 맺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은 MBK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만, 머지 않아 공격의 고삐를 풀 수 있다고 걱정한다.

MBK가 7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한 만큼, 기대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유통 시장이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 점이다.

현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매각이 발표된 직후인 9월 8일 일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노조는 나눠져 있지만 2007년 강력한 매장 점거 투쟁으로 마트 여성 노동자들의 저력을 보여 준 이랜드 노동자들도 홈플러스로 인수돼 함께 투쟁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도 크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70여 곳이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학 청소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며 커다란 잠재력을 보여줬다. 홈플러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그 뒤를 잇고 있다.

조명지



9월 8일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매각 규탄 집회를 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위험, 지금(9~10월)이 저항할 때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강행 추진 예고는 타협 결렬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막판 합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후신)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5월 1일까지 국회특위에서 개악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실무기구는 5월 1일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을 냈다.(이 합의에 공노총과 교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공노의 이총재 당시 집행부도 서명했다.)

흔히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이런 협상에 매달리곤 한다. 자신들이 타협에 나서지 않으면 더 나쁜 안이 관철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한국노총이 막판 타결로 이끌릴 위험이 적지 않은 이유다.

정부의 노림수는 둘째, 명분 쌓기다. 노사정위 타결이 안 돼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강행하더라도,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물론 노사정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 논의에 들어가면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답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길을 택할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박근혜가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정치 상황, 피죄죄하고 한심한 새정치연합, 노동계 저항 가능성의 불투명성 등은 정부가 이런 길을 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 노사정위 논의 중단 촉구와 논의 개입, 둘 다?

어느 경우이든, 이 신문의 지난호 사설 ‘이렇게 생각한다’(필자의 논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에 부쳐’로 대신한 글)에서 강조됐듯이, “9~10월 투쟁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그 글은 “무엇보다 투쟁의 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일들이 이때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는 노사정위 타결 또는 정부 주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 강행의 기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노사정위 대타협이 이뤄진 후 국회 법안 논의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막판 타결을 막거나, 설사 타결되더라도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코 노동자 대중을 대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대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 결정대로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9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규모 저항을 지금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 결정대로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10일 ‘노사정위 논의 중단 촉구’ 농성을 아무런 후속 투쟁지침 없이 종료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상당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은 당장 투쟁을 배치할 동력이 있는가 하는 회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지난 몇 달 동안 제시하거나 실천한 방향이 조합원들의 투쟁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가령 노사정위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는 표면적인 단호함과는 달리 내부적 혼란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대타협이 성사되느냐에 관계없이 복귀만으로도 (정치적 상징으로서) 효과를 낼 것이 뻔했다. 그것은 주요 공기업들의 급속한 임금피크제 합의와 투쟁 전선의 동요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전에 강력한 반대 압력을 형성하지 않았다(한국노총 기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 전에 민주노총과 야당이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의 군불을 피운 것도 (의도치 않았을지라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준 면이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그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노사정위 내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 논의에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애초 예정됐던 9월 11일 파업 계획을 12일 집회로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은 임금피크제 노·정실무협의 제안에서도 나타났다. 기재부가 ‘원포인트 협의체’ 참가를 거부했

을 때 한국노총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부해야 마땅했지만, ‘원포인트 협의체’ 대신 ‘노·정실무협의 기구’로의 대체를 수용했다. 노사정위 논의의 걸림돌을 치워 준 셈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를 수용했다. 어쩌면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이라는 점에 구미가 당겼는지도 모른다.

## 대안을 현실화할 물리적 힘

한편, 민주노총은 8~9월 정책 대안 제시에 공을 들였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임금피크제 등 ‘사회 여론’ 환기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그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물론 대안적 요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대안을 관철할 힘, 즉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의 사용자 책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같은 요구는 전혀 새롭지 않다. 심지어 여론조사(리얼미터)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고용이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통한 신규채용이라고 여긴다. 문제는 그것을 현실화할 물리적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다.

일부 노조 지도자나 엔지오 또는 온건 개혁정당의 지도자들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는 주장을 흔히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주장은 대안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정부측 개악안에 대한 일관된 반대가 아니라 타협(양보)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다.

이것은 노동운동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투쟁이 아니라 협상과 사회적 대화에 우위를 두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의 허구를 폭로하며 투쟁 속 단결을 제시하기보다, 정규직-공공부문 방어를 수줍어 하며 양

보론(가령 고통분담형 임금피크제나 임금삭감형 노동시간단축)을 기웃거리는 것은 대안을 현실화할 힘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하는 회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현장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투쟁을 호소하면 응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보다 ‘왼쪽’(지도가 제공되면 발휘될 투쟁성이라는 면에서)에 있음을 거듭 드러냈는데, 좌파 활동가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에도 철도노조 강제전출 합의 부결 등 몇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만 꼽자면 지난 8월 29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안이 통과된 것이다.

연가투쟁 폐기 수정안은 가뻔히 부결됐고, ‘활동가 연가’를 ‘전 조합원 연가’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은 5표가 모자라 아깝게 부결됐다. 만약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진정한 정서를 읽고 미리 전 조합원 연가를 자신 있게 설득했다면, 이것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 투쟁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비록 현재의 노동자 투쟁이 대체로 보아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이지만, 이것은 한국 노동계급이 약화돼서이거나 현장 조합원들이 사기저하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반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민주노총 소속이나 한국노총 소속이냐를 막론하고 지도부가 이끌면 싸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좌절된 이유는 노조 지도부들이 파업을 철회하거나 사실상 힘을 신지 않거나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 노동계급의

상태로는 전통적인 파업 양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은 주장인데다 파업을 회피하는 소심한 노조 지도부를 정당화하는 주장이기 십상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총파업 주장(이상주의적)도 나온다. 노조 지도자가 소명하지 않는데도 아래로부터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가 고민이겠는가.

현장 조합원들이 불만과 분노는 크지만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이 있지는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공식 투쟁 소명을 기회로 삼아 현장 조합원들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것, 기본적으로 기층을 강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점에서 보면, 답답한 마음에서 실질적인 파업 조직이나 기층 강화를 가두 선도투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민주노총은 9월 12일 공공부문 집회를 비롯한 일련의 투쟁들을 민주노총 차원의 항의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9월 19일에는 교사와 공무원 집회가 있고, 9월 17일에는 조선업종 2차 공동파업, 9월 18일에는 전국 교수대회가 있다. 금호타이어 지부는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현대차지부도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 반대 등 문제로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기층의 투사들과 활동가들은 각 부문의 투쟁들이 성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저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악 반대, 임금 인상 등을 위해 투쟁하면서 맹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선업 노동자, 현대차 노동자 등이 성과를 거두도록 그들을 방어하고 지지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 박설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건 불합리하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2012년 현재 OECD 평균보다 연간 3백27시간, 41일을 더 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다(54.3퍼센트). 법정 초과한도를 넘어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 꼴이다(3백57만 명, 19퍼센트).

따라서 민주노총의 제안처럼, 적어도 현행법 수준으로 휴일근무를 포함해 연장근무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도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연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새로운 일자리 1백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국내의 경험들을 봤을 때, 주당 1~2시간처럼 작은 폭의 노동시간 단축이나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일시에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하고, 법적 강제(법정 노동시간 단축)가 뒷받침돼야 한다. “수년 내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지적이 타당한 이유다.

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투잡의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사진:이윤상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임금 등의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갈망해 왔다.

## 새정치연합의 정규직 노동시간 양보론

그런데 최근 새정치연합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대기업 정규직 양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며, “먼저 대기업 노동자가 청년·비정규직에게 노동시간을 양보”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임금 삭감을 전제한 것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자체는 반대하지 않은 채 ‘노사 자율’ 시행만 말하거나, 공무원-교사의 연금을 깎은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의 손을 잡는 척 하면서 실상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편드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정규직의 희생 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피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정부·여당과 방법·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경계해야 할 점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많은 경우 ‘노조의 양보 교섭과도 연동이 돼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맹점이 있다. 노동운동이 이 점을 경계하며 잘못된 후퇴로 나아가지 않도록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 불황이나 기업의 경영 악화 속에서 노동시간, 근무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정리해고 같은 극단적 방법을 피하는 대신 노동자들끼리 일감을 나누고 임금을 삭감하는 고통분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곳곳에서 경기 불황 시기에 이런 양보 교섭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급속노조가 “노사정의 공동 분담”을 기초로 한 ‘일자리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 대변인은 임금피크제 대신 사실상 노동시간과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노동시간피크제를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상임금을 확대해야 기업들이 연장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옹계 지적했지만,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시간 단축에서 쟁점은 임금 문제만이 아니다. 현대·기아차의 노동시간 단축(주간연속2교대제) 논의에서는 노동강도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노조 집행부는 2012년에 줄어든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는 방안에 타협했다. 올해 입단협에서도 같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 후퇴를 전제한 방식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역설적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산업·특근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낮은 기본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노동자들이 다시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려고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조건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강도 강화가 수반된다면, 노동시간을 줄여도 신규채용 없이 기존 인력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돌리면 되니까 말이다.

따라서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럴 때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 “일 중독”?

노동운동 내 일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노동조건을 대립시키며, 노동자들이 여유 있는 삶을 위해 양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초과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한탄하며 노동자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일 중독”이나 “소비 중독”에 빠져 장시간 노동에 매달린다거나, 초

과노동 단축에 의지가 없다는 식의 비아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장시간 노동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싼 값에 노동자들을 부리려고 낮은 기본급과 장시간 노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가리는 효과를 낸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갈망해 왔고 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는 점을 무시한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에서 임금·노동조건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조건으로부터 초연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작 싸움의 주체가 될 노동자들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동운동 내 일부는 정반대로 노동시간 단축 자체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이 임금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거나, 혹은 필연적으로 생산성 증대(노동강도 강화)나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삭감이나 노동조건 악화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1999년 프랑스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제가 법제화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한국에서도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줄었을 때 98.9퍼센트에 이르는 노동조합들이 임금을 인상시켰다.

물론, 이런 성과가 계속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자본가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을 고안하곤 했다. 프랑스에서도 사용자들은 변경근로시간제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손실을 만회하려 애썼다.

문제는 결국 계급 간 힘의 관계다. 노동시간 단축이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악화시킬 뿐

## 이정원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도의 직군에 편성된다. 이는 단일 호봉 체계를 무력화 하는 임금체계 개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정부

는 이미 성과연봉제, 퇴출제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 고용도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1백 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총 1천8백79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36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채용 인원이 제로(0)다.

## 노사정위 재개와 공공운수노조의 위험한 대응

정부는 지금 임금피크제 관철에 “탄력이 불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들로 확

대하고 있다. 특히 9월 중에 철도공사, 공항공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에서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성공하면 나머지는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밀린 것은 단지 정부의 압박이 거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은 커다란 약점을 보여 줬고 투쟁을 악화시키는 구실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의 (대정부) 교섭 중시 정책은 이번에도 커다란 문제를 낳았다. 이들은 노사정위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관한 ‘원포인트 협

의체’가 구성되자, 여기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대차게 나왔고, 결국 노사정위 밖에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대노총 공투본이 노정협의를 요구해 온 것을 미끼로 삼아 실무협의를 제안했는데, 이 협의는 임금피크제 수용을 전제한 것이다.

공투본은 이것이 “실리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모순적이게도 실무협의를 응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임금피크제 수용을 인정한 셈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직접 이 협의에 참가해 총액인건비 증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폐지, 무기계약직 임금피크제 미적용 요구, 기존 60세 정년인 기관은 임금피크제 미적용 등의 요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들은 임금피크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들이지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 주면 노조가 요구한 기준들도 점차 후퇴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속에서 당연히 투쟁 건설은 뒷전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상황에서 파업을 하긴 어렵다’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의 논리를 추수하며 9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은 중국 관료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배계급도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한다.

그리스, 유럽 난민 위기, [영국 노동당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부상] 등 극적인 여름이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경제 기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사라진 주식 가치는 3조 파운드[한화 5천5백조 원]에 이른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월가나 런던 시티, 심지어 홍콩의 주식시장과 다르다. 중국 주식시장은 대기업 주식의 거래가 압도적이며, 그 대부분은 국영기업들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등락으로부터 비교적 격리돼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와 관련돼 있다.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 덕분이었다. 중국 국내총생산(이하 GDP)에서 투자는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평범한 중국인들의 가계 저축도 투자 재원을 떠받쳤다. 의료·교육 등의 지출을 위한 저축이었다. 그러나 국유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매우 낮았다.

그 대신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저축을 갖고 주식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중산층 단타 매매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활개를 쳤다.

지난 4월 <런민르바오>[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일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자본시장은 ‘차이나 드림’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

‘차이나 드림’은 시진핑 주석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

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주식시장을 떠받치려고 개입했다. 중국 정부는주가 하락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하기까지 했다.

## 모순

정부의 대응은 현 중국 지도부의 정책들에 존재하는 주요한 모순을 보여 준다. 시진핑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덩샤오핑 시대 이래 유례 없을 정도로 권력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부패 척결 운동을 벌여 인기를 높이고 정적도 제거했다.

다른 한편, 시진핑은 국가 통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더 의존하면서 중국을 세계경제에 통합시킨 덩샤오핑의 전략을 지지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8월 11일 중국 당국은 위안화-달러화 환율이 더 자유롭게 변동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의 장기적인 목적은 위안화를 국제 지불준비 통화로 만들어 달러화 및 유로화와 경쟁하는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정부가 폐지되면 내년에 위안화를 지불준비 통화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지배자들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약간 평가절하돼 수출이 늘어나길 바랐다.

이런 지배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식시장은 대환란에 빠졌고 위안화 가치는 폭락했다. 결국 중국 당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폭을 줄이려고 1천3백억 파운드(한화 2백38조 원)를 쏟아부어야만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갈



사진 출처: 2 dogs (블리크)

중국 주식시장 붕괴의 근저에는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광질판하는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역대 전임자들이 그랬듯이 시진핑도 중국이 고투자·고수출 모델(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와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입발림 말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2008~09년 세계 대침체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한 덕분에 가능했다. 그 대신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중국의 부채는 GDP 대비 1백30퍼센트에서 2백80퍼센트로 증가했다.

주식시장에서만 거품이 생긴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서도 거품이 생겼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투자·부채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 결과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것은 특히, 중국에 식료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성장한 남반구의 ‘신흥시장’ 경제에 영향

을 미쳤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는 그 자체로 경제의 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붕괴는 시진핑 치하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조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끈경이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을 뜻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70호



임금피크제 반대 거리 홍보전에 나선 철도 노동자들.

11일 경고 파업을 취소했다.

공공운수노조 방침은 ‘노사정위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별 합의 거부’인데, 이 때를 전후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려는 듯하다. 투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퇴각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은

산하 노조들에게 ‘투쟁해 봐야 승산 없다’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

5개의 주요 공기업(철도, 가스, 공항, 지역난방, 공항 공사) 노조 대표자들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같은 요구를 해 오면 교섭을 중단하고 쟁

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런데 이는 임금피크제 문제로는 쟁의를 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 기층의 임금피크제 반대를 보여 준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지금 투쟁이 불리하게 기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층에서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철도와 같은 작업장에서 활동가들이 공공운수노조의 노정 혐의를 비판하며 압력을 넣고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해 가야 한다.

최근 철도노조 서지본은 경영평가 폐지를 전제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일자리 확충 재원으로 내놓겠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을 비판하며, “노정교섭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 투쟁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는 기층 대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대의원들은 노조

집행부에 ‘사측의 압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다.

이날 김영훈 집행부는 교섭 사항 전반을 위원장에게, 쟁의 행위 결정을 중앙위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5월 김영훈 집행부가 근속승진제 폐지에 합의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김영훈 집행부는 임금피크제 거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의원들은 총액인건비 증액, 신규채용 정원 증원, 별도 직무 반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포함하고, 9월 중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절차를 밟는다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교섭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협상 결렬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 활동가들은 투쟁 전선이 불리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완전히 저지하기 어렵다고 본 듯하다. 이는 공공운수노조의 입장과 대응이 기층의 투쟁 건설을 제약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철도노조 활동가들이 ‘노동계약 및 가짜 정상화 저지 철도노동자 현장투쟁위원회’(가칭 철투위)를 결성해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갑다. 한 활동가의 말처럼, 현재 투쟁이 기울었어도 철도에서 저지선을 치고 버티며 다른 노조들에게 투쟁을 호소한다면 투쟁의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공운수노조의 조건부 임금피크제 수용을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투사와 활동가들도 어렵더라도 모두 사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재벌의 기원 – 탐욕과 부패의 역사

김지윤

한국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4.1퍼센트에 달한다. 이들이 쥐고 있는 자산도 1천70조 50억 원으로 GDP 대비 84퍼센트를 차지했다(2013년 기준, 정의당 박원석 의원).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2년 기준 1천2백46개다. 소수의 기업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 국가의 특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 적산불하와 원조 자금

해방 이후 적산[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불하와 원조 자금은 재벌 탄생의 시초가 됐다.

해방 당시 적산은 국내 총자본금의 91퍼센트나 됐다. 한때 노동자들이 직접 적산을 관리했다. 그러나 이내 미군정이 무력으로 강탈했고 이승만은 정권과 결탁한 자들에게 적산을 불하했다.

이승만 정권은 자본가들이 적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상황기간도 10년이나 뒀다. 당시의 엄청난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거저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전쟁 중에도 적산불하는 계속됐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 자금은 남한 예산의 1백 퍼센트에 이를 정도였다. 이런 원조 자금으로 원조 물자를 사서 가공해 파는 자본가들이 등장했는데, 삼성의 모태가 된 제일제당과 삼양제당 같은 기업들이 원조 자금을 거의 독차지했다. 럭키(현재 LG), 두산 등의 기업도 원조차관을 받으며 성장했다.

한국전쟁도 재벌들에게 돈벌이의 기회였다. 이병철은 1951년에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한국전쟁 중에 물자 부족과 물가 앙등을 이용해 급속하게 부를 쌓았다. 이 회사는 1952년에 17배나 성장했다. 정주영은 미군 막사 공사 등을 따내 막대한 돈을 벌었다. 당시 설립한 현대상운은 소금, 식료품, 양곡 등을 독점 운반하며 성장했다.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4년에 추진된 은행 민영화를 통해 은행들이 줄줄이 재벌들 손에 넘어갔다. 은행 민영화로 시중 은행 4곳의 주식의 절반 가량이 삼성의 소유가 됐다.

이승만은 삼성의 이병철에게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같은 옛 일본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했다. 이병철은 이승만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해 이에 보답했다. 5·16 쿠데타 이후 설립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축재자 1호’ 이병철은 자유당 정부에 정치자금 4억 2천5백만 원을 제공했다.

## 정경유착

4·19 혁명으로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등 주요 자본가들은 부정축재자에 이름이 올라 민중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됐다. 그러나 장면 정권이 부정축재자들에게 부과한 벌금 1백96억 원을 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자가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

도록 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박정희는 노동자와 민중을 혹독하게 탄압하고 쥐어짜면서 재벌들이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대 당시 국내 은행의 금리가 25~30퍼센트였을 때 박정희 정부는 5~6퍼센트의 낮은 차관 금리로 외국 은행에서 돈을 꾸서 재벌에게 빌려줬다. 그리고 수출하는 자본가들은 소득세를 절반만 내도 됐다.

삼성은 원조 달러를 이용해 생산한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되팔아 폭리를 챙겼다. 박정희 정권은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해 삼성이 산요와 합작해 삼성전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1966년 삼성과 박정희 정권이 막대한 검은 돈을 조성하고자 공모한 사카린 밀수 사건이 폭로돼, 대학생들은 “민족의 피를 뺀 이병철을 즉각 구속하고 민족적 대죄를 진 악덕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희 경제 건설의 믿음직한 파트너로 선정된 현대건설도 이 시기 급속히 성장했다. 현대건설의 1966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1백73.6퍼센트 성장했고, 자본 총액은 1961년에 비해 29곱절이나 늘었다. 정주영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부터 “충실한 자문역”이었고 박정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주영에게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사”했다. 현대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던 소양강 다목적댐 공사에 도 불과 10분 만에 지명됐다.

박정희 정권은 불황의 조짐이 보이던 1972년에 기업과 사채권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8·3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이자를 대폭 줄여서 사채시장에서 고리 단기 사채를 끌어다 써서 재무구조가 악화되던 재벌 기업들은 일순간에 숨통이 트였다.

1977년 현대 계열인 한국도시개발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지어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신문사 간부들에게 한 채씩 상납했다.

부정부패와 권력 유착, 노동자 탄압은 재벌의 공통된 ‘경영 철학’이었다.

## 특혜와 상납

1986년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부실기업 정리’로 재벌들은 더욱 몸집을 불렀다. 인수하는 기업에는 특별자금 4천6백억 원이 저금리, 장기상환으로 주어졌다. 원리금 4조 2천억 원은 상환 유예됐고, 은행 부채 1조 원은 갚지 않아도 됐다. 온갖 세금 면제 혜택도 주어졌다. 이렇게 피부어진 특혜 9조 원은 1988년 전국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성취한 임금 인상액의 1.3배가 넘는다(《감추어진 독점재벌의 역사》).

전두환은 삼성에 율곡사업과 차세대 전자기 사업 등의 특혜를 주며 정치자금 2백20억 원을 받았다. 정주영은 ‘올림픽 추진위원장’과 ‘일해재단’ 이사장직을 하면서 2백억 원을 뇌물로 전두환에 갖다 바쳤다. 정주영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의 댐 건설 공사를 따내는 등 온갖 특혜를 누렸다. 구인회의 아들 구자경도 1백억 원이 넘는 기부금과 30억 원의 일해재단 성금을 전두환에게 바쳤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제3나프타분해센터를 럭키에 낙점했다.

1980년 화학섬유기업이던 선경(현재 SK)은 자신의 몸집의 5배나 되던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했다. 선경의 최종현과 노태우의 커백션 덕분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후 노태우와 사돈지간이 된 선경은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불만이 확산되자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임기말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고, 1994년 김영삼 정권은 전경련에 사업자 선정 전권을 넘겼다.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최종훈은 손쉽게 한국이동통신을 품에 안았다. 법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처분 등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체신부는 선경이 신청한 ‘자구노력 유예’를 인정했다. 선경은 사실상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집어 삼켰다.(현재 SK텔레콤)

국영기업 두 곳의 민영화로 선경은 순식간에 한국 4대 재벌이 될 수 있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은 정치 자금 1조 7천억여 원을 마련했다. 이병철에 뒤이어 이건희는 2백 50억 원을 노태우 정권에 헌납했다. 삼성의 역대 정권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은 드러난 것만 해도 8백 60억 원에 달한다(2005년 참여연대). ‘금수저’ 재벌 2,3세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

1987년 이병철은 당시 자산총액 11조 원이었던 그룹을 단돈 1백50억 원의 세금만 물고 이건희한테 넘겼다. 이 재용은 이건희로부터 “편법증여”받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60억 원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의 이재용, 이서현, 이부진 3남매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주식자산만 2조 원이 늘었다.

SK 최태원은 자신이 지분 1백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인 위커힐호텔과 SKC&C가 보유 중인 SK(주)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SK(주)의 대주주로 등극했다.

## 진짜 주인

재벌들은 노동자들 없이는 단 하나의 공장도, 부품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

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부와 그에 따른 명예는 재벌에게 돌아갔다.

세계 1위라는 삼성 반도체에서 노동자들은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고통받아야 했다. 이건희가 프랑스 스키장 3곳을 통째로 빌려 즐기는 동안 노동자들은 도청과 사찰, 감시에 시달리며 노조 결성조차 가로막혔다. 2013년 폭로된 ‘S그룹 노사전력’ 문건은 삼성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드러냈다.

1973년 세계 조선소 건설 사상 최단 시일인 27개월 만에 완공된 현대조선소의 명성이 있기까지 노동자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노동자는 “최고 40시간까지 잠 한 솜 못 자고 일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1989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테러에는 식칼, 쇠파이프까지 등장했다. 1990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파업에는 경찰을 1만 5천여 명이나 동원해 파업을 파괴했다..

1980년대 말, 3저 호황으로 현대는 61퍼센트, 삼성은 46퍼센트, 럭키금성은 1백 퍼센트나 성장했지만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여유가 없다”며 쥐어짜기를 멈추지 않았다. 10대 재벌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시기에도 자산과 매출액 증가율이 10.93퍼센트와 7.69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평균 경제성장률 2퍼센트를 웃도는 수치다.

그런데도 이 자들은 뻔뻔하게 고통분담이라며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노동자 탄압으로 부를 쌓은 재벌들이야 말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강동훈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벌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패키지로 다룰 새로운 노사정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비슷하게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 내용인즉,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내놓고 고위 임원의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합리적 임금 조정을 수용하거나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발상들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내걸고 투쟁하면 고립돼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보다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명분을 얻고 국민적 인기를 얻는 ‘재벌 개혁’을 내세워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게 조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이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더 낫다는 것이다.

김유선 선임연구원은 이런 타협안을 이렇게 정당화한다: “노동계는 조합원의 요구를 중시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은 가망 없다는 이런 주장들은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로 기울기 쉽고, 사실 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은 이렇게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한다.”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하라.” 재벌도 돈을 내되 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절박

그러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정부와 기업도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인들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한 경제5단체를 보면,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신속하게 ‘노동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개혁’을 추진해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 대응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중 하나가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인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업주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물론 노사정위와 노정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한 재벌 과세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의 이인영·은수미 의원 등이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고 제출한 법안들이 시행돼도 세수가 2조~3조 원 밖에 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비정규직이나 청년 고용 문제를 해

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벌들은 이윤을 여러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이런 세금마저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약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늘어난 세금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9월 10조 원을 들여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대타협은 이전의 많은 개혁주의적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현금(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내주고 부도어음(재벌 개혁)을 받는 게 되기 쉽다.

2007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기초연금(소

득대체율 10퍼센트)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즉각 삭감됐지만 기초연금은 수년간 도입을 미루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완전히 누더기가 돼 시행됐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퍼센트 이상씩 청년을 고용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해고 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 등에 절대 합의해 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다. 몇 달 전에도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감축 논리를 내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에 대해

최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재벌 국유화(사회화)를 주장하며,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백10조 원을 환수해, 최저임금 1만 원,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매년 기업이 거둬들이는 이윤 중 세금과 배당 등을 제외하고 축적한 자산을 뜻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환수는 재벌의 자본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 재벌 개혁론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 인상이나 사내유보금 과세처럼 재벌 이윤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는 요구보다 훨씬 급진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인 주장이다.

왜 재벌 몰수가 아니라 사내유보금 환수인지, 사내유보금 환수를 유상 몰수로 할 것인지 무상 몰수로 할 것인지, 사내유보금 환수 요구를 자본주의 내에서 가능한 개혁 강령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 가도록 다리를 놓는 전환(“이행기”) 강

령으로 여기는지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추진위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주장이 나오는 듯하고, 몇몇 사람은 두 주장을 모두 하거나 혹은 모든 주장에 대해 열어 두는 듯하다.

물론 이런 쟁점들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고양되고, 운동이 훨씬 더 치열해질 때는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내유보금 환수는 재벌 몰수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유상 몰수로는 가능하지 않은 전환(“이행기”) 강령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 현실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 중요한 물음은 이렇다. 현 정세가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벌일 만큼 운동[특히 계급투쟁]이 고양되고 있는가?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현실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추진위는 재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지금이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을 해야 하는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과 재벌에 맞선 효과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다르다. 추진위는 운동의 주요 방법으

로 ‘1만 인 선언운동’, 거리 홍보전 등 사내유보금 환수를 선동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대중 집회도 기획하고 있다.

물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같은 급진적 요구를 내걸고 선동을 하거나 대중 집회를 여는 것은 지지받아야 한다. 추진위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자기 단체의 변별적 표지로 삼아 자신들의 창당 계획 홍보에 이용하는 것이 광범한 대중 운동 건설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추진위는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쌓인 사내유보금을 거론하며) 사업장에서 자신의 고용주에 맞서 싸우는 방식은 배제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대중적 공분을 모아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를 논하는 것에 많이 미달”하고,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분배격차를 늘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송명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의 목표는 재벌 국유화’) 개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 특유의 계급투쟁보다는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 대중이 계

세우며 공무원노조에 공무원연금 삭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권유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를 누더기로 만드는 데 일조해 왔는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기초연금 공약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협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마지못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려면 기업주·부자들이 정부에 가하는 압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노동계급으로부터 위로 발출돼야 한다. 특히, 잘 조직돼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을 병행하자(맞바꾸자)는 사회적 타협론으로는 투쟁을 진지하게 호소하기가 힘들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양보하는 데 열의를 보일 리 없을 뿐 아니라, 노사정위 논의나 새정치연합에 기댄 입법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법은 불확실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약속을 기대하며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다른 노동자 집단들에게 입증해 보여, ‘뭉쳐서 싸우면 동지들도 더 좋은 조건을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무된 노동계급 내에서는 연대투쟁과 계급의식도 발전해, ‘노동계급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급을 가로질러 재벌 반대로 단결해야 한다는 포퓰리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핵심적으로 연루시켜야만 한다. 선언 운동이나 거리 집회 등과 달리 재벌의 이윤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은 재벌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서 재벌의 엄청난 사내유보금과 그 밖의 이윤을 비판하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설득한다면, 더 대중적이고 실질적인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과 여타(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착취자)에 맞서 싸우는 것을 한 편으로 하고, 노동자와 청년·학생, 여성, 기타 차별받는 모든 대중이 재벌과 부유층에 증세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인터뷰

#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물음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연대〉 신문의 국제팀 일원인 **차승일 기자**는 지금 그리스를 방문 중이다. 그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핵심 간부이자 당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와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 안의 말은 한국어판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Q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그리스 대중의 좌경화 흐름은 여전히 강력할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좌파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좌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대중은 더 큰 투쟁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 그들은 시리자에 투표했고, 그것은 왼쪽으로의 이동이 맞다. 그러나 그 뒤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주로 시리자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 정부는 딱 노동자들이 준 바만 만큼만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다.’

시리자 바깥의 좌파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공산당(KKE)입니다. 공산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강경한 강령이 있다. 우리 강령은 IMF·유럽연합과의 단절을 주장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태세가 돼 있지 않다.’

우리는 그런 주장들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급진화하고 있고, 그 급진화 물결은 계속되고 있고, 그 급진화의 종착역은 시리자가 아니다. 시리자가 타협하면, 그것은 시리자가 개혁주의 정당이기 때문인 것이다. 노동자들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지난해에도, 1월 총선 때도,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리자 정부 하에서도 노동자들은 시위와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리자 정부가 피레우스 항구를 폐쇄하겠다고 했을 때 항구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고, 병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시리자 정부의 타협에 맞서 싸울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 7월 5일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61퍼센트가 정부는 타협하지 말라며 채권단이 내놓은 긴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때 노동자의 80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30세 이하 청년의 80퍼센트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대중의 급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실입니다.

**Q 지금 상황이 좌파에게 유리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1월 총선에서 시리자 바깥의 좌파는 6~7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월 20일 총선에서 공산당은 5퍼센트 정도로 1월과 비슷하게 득표하고, 시리자에서 이탈해 나온 세력들이 5~6퍼센트 득표하고,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속한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체] 안타르시아는 그 보다는 적게 득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리자 바깥의 좌파가 모두 합쳐 10~15퍼센트를 득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리자 바깥 좌파의 득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Q 선거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 정부에 실망했지만, 우파인 신민당이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리자에 투표해야만 한다는 논리가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 대중의 정서는 어떨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파 정당들의 복귀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리자가 신민당과 함께 3차 구제금융안에 찬성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옛 정당들의 복귀를 돕고 있는가?’

시리자는 우파 정당들을 더 찌그러뜨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자는 우파 정당들이 복귀할 기회를 줍니다.

치프라스는 또 다른 주장도 합니다. 치프라스는 좌파들의 비판, 즉 시리자가 우파들과 함께 새 구제금융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우파의 회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을 주장이 맞다. 시리자가 신민당과 함께 구제금융에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제 문제는 누가 긴축안을 시행할 것이냐이다. 당신은 누가 하기를 바라느냐? 좌파냐 우파냐? 바로 우리다. 왜냐하면 우리는 긴축의 흑독함을 완화시키려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치프라스가 1월 총선을 앞두고 한 공약보다 더 신뢰성이 없습니다. 긴축을 끝내겠다는 치프라스는 채권단의 협박 속에서 긴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고, 따라서 유럽연합, IMF, 은행가들은 더 많은 회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협한 것은 맞지만, 더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치프라스의 주장을 신뢰할 근거가 없습니다.

**Q 그러면 안타르시아는 9월 20일 총선에 독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까?**

총선에서 공산당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산당은 너무 종파적이어서 공산당 말고는 모두 잘못이고, 그 누구와도 선거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협력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안타르시아는 시리자에서 이



9월 5일 그리스 테살로니키 긴축 반대 시위에서 좌파와 함께 행진한 교사노동자(부엌이 그림 배너).

탈해 나온 사람들이 만든 민중연합(Popular Unity)과 선거연합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강령으로 삼을 요구들을 내놓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연합은 안타르시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둘 사이의 이견 하나는 유럽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구제금융에서 빠져나오려면 유럽연합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안타르시아는 주장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을 포괄해 유럽연합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은행가들 편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이 유럽연합에서 나올 태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유럽연합에는 남을 수 있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민중연합은 ‘예를 들어 덴마크는 유럽연합에는 가입했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들이 보기에 그리바람직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르시아는 우리가 덴마크처럼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덴마크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



파노스 가르가나스.

지만, 긴축이 시행되고 있고,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르시아와 민중연합 사이에는 유럽연합을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의회를 둘러싼 이견도 있습니다. 시리자는 1월 총선 전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좌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좌파 정부가 은행가나 유럽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전략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파의 득표가 늘기를 바라며 총선에 출마합니다. 민중연합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서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수가 얼마나 많은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공약 중 많은 것이 시리자 전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입니다. 민중연합은 개혁주의에서 이탈했지만 절반만 이탈했습니다. 우리는 민중연합이 시리자에서 나온 것을 환영하면서 더 철저히 단절하라고 주장합니다.

**Q 시리자를 새로운 정당 모델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리자 좌파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좌파들이 그런 견해를 받아들여 혁명적 좌파가 시리자에 입당해 정부에 들어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시리자 좌파는 시리자를 비판하며 탈당하고 있는데, 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라고 말합니까?**

자기 비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까지도 시리자를 분보기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더는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많은 세력을 모아 신자유주의와 긴축나 많은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

다. 오랫동안 좌파가 후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후퇴를 막을 방도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혁명적 좌파는 매우 작았고,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혁명적 좌파의 중요성을 간단히 일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좌파를 결속시키자는 주장은 많은 경우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무시하고, 시리자 경험은 그것이 오류였음을 보여 줍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불러온 계급적 양극화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며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역사적 차이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두 길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해서 우리는 민중연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중연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

다. 오랫동안 좌파가 후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후퇴를 막을 방도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혁명적 좌파는 매우 작았고,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했습니다. 혁명적 좌파의 중요성을 간단히 일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좌파를 결속시키자는 주장은 많은 경우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무시하고, 시리자 경험은 그것이 오류였음을 보여 줍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불러온 계급적 양극화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며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라는 역사적 차이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두 길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근거해서 우리는 민중연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중연합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유행한 이유가 있습니

다. 오랫동안 좌파가 후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후퇴를 막을 방도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혁명적 좌파는 매우 작았고, 그래서 그런 주장들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Q 앞에서도 얘기가 나온 그리스 노동운동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투쟁에 나서는데 더욱 주저합니다. 이런 보수성을 극복하려면 평조합원들의 주도로 필요 합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안타르시아가 2011~12년 대중파업을 이용해 평조합원 네트워크를 건설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총연맹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노동총(GSEE)입니다. 그리스노동총은 주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노동총(ADEDY)입니다. 공공부문노동총은 주로 공무원·교사·병원노동자 등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 그리스노동총이 좀 더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노동총은 찬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공공부문노동총은 더 작지만, 좌파적이고 국민투표에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노동이 투쟁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파업 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평조합원 네트워크를 건설할 때 그 노조 안에 혁명적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노동운동 개입은 어떻게 됩니까?**

혁명이들은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6백 명가량 됩니다. 그중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은 두세 명입니다. 그들이 그 노조[지부]의 집행권을 차지했습니다. 좌파적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조직 활동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좌파적 노동조합들의 상층 지도자들이 시리자 지지자와 민중연합 지지자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민중연합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조합원 수준에서 조직해야 합니다. 총선 후에 민영화와 임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노동자 투

쟁이 중요한 승리를 거두려면 전략적으로 명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지, 왜 혁명적 좌파가 필요한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ERT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재무부 여성 청소년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도 연대 운동을 건설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여러 달 동안 재무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연대 운동을 건설하면서 협력기구는 일부 전투적 노동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협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ERT 노동자들은 복직했고, 그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재무부 여성 청소년노동자들도 복직을 약속받았습니다. 세 정부가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투쟁이 계속되지 못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장의 평조합원 조직 혼자서는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평조합원 조직이든 교사 평조합원 조직이든 혼자서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전망은 이렇습니다. ‘평조합원 수준에서 조직하고, 그들 사이의 협력을 조직하고, 다가를 큰 투쟁을 위해 연대를 건설한다.’

**Q 평조합원 네트워크를 건설할 때 그 노조 안에 혁명적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노동운동 개입은 어떻게 됩니까?**

혁명이들은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6백 명가량 됩니다. 그중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은 두세 명입니다. 그들이 그 노조[지부]의 집행권을 차지했습니다. 좌파적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조직 활동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좌파적 노동조합들의 상층 지도자들이 시리자 지지자와 민중연합 지지자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민중연합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조합원 수준에서 조직해야 합니다. 총선 후에 민영화와 임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노동자 투



그리스

#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에 굴복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정치와 경제가 모두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산업자원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며,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소속 활동가다. 이 글은 8월 말에 쓰여졌다.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는 7~8월이 휴가철이 아니었다. 무더위 때문에 급격한 정치적 발전과 노동자 투쟁이 한숨 고르던 일은 과거지사가 됐다. 특히 올해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에는 아찔할 정도로 국면전환이 빨랐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민중은 무려 61.3퍼센트가 긴축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리스 민중에 맞서는 세력은 은행 영업을 중지시키도록 강요한 유럽중앙은행, 그리스 자본가 계급 전반, 언론 재벌들, 정교회, 세대를 불문하고 보수 정당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속한 정치인 수백 명이었다.

매일같이 협박이 쏟아졌다. “[긴축에] 반대를 찍으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시리자 소속 장관들조차 긴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에도 투표 결과는 노동계급이 뚜렷하게 긴축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테네 근교 부촌에서는 80퍼센트가 긴축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계급 거주 지역인 아테네 서부와 피레우스에서는 반대표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정부는 국민투표로 드러난 긴축 반대 의사를 바로 다음 날 찬성으로 뒤집어 버렸다. 치프라스는 간접세(부가가치세) 인상, 5백 억 유로[약 67조 원] 규모의 민영화, 더 내지만 더 늦게 반도록 연금 개악 등 일련의 가혹한 긴축 조치를 채권단과 합의했다. 치프라스는 내년에 불황으로 경제 규모가 3.3퍼센트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재정 흑자를 유지하라는 요구도 수용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 모든 법안을 우파, 중도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손잡고 의결했다.

8월 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3인조]에 유럽안정화기구(ESM)가 더해진 ‘콰르텟’[4인조]이 그리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항만·공항 즉시 민영화,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즉시 67세로 연장, 약국과 병원 이용료 신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동 유연화, 단협 폐지, 부자들을 위한 더한층의 감세 등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8월 20일에 3차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이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새 양해각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약 8백 억 유로를 새로 대출 받지만, 이중 대부분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데 쓰인다! 이것이 유럽연합(EU)의 진면목다.

시리자 정부 내 다수는 굴복했을지 몰라도, 기층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좌파적 긴축”은 사기다. 옳은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7월 15일 3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난 5년간 긴축 반대 운동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시리자의 행동에 실망했음에도 여전히 계속 투쟁하려 한다.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린다. “우리는 표를 무기 삼았지만 그 무기를 뺏겼다. 이제 우리는 파업을 무기로 삼을 것이다. 이 무기만큼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다!”

7월 공공부문노동조합(ADEDY)은 새 법안이 의회에 부쳐지던 날에 파업을 벌였다. 아침에 열린 파업 집회에 수많은 노동자가 참가했다. 주된 구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좌파적 긴축”은 사기다. 옳은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같은 날 아테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그 날 저녁, 수많은 사람들이 더 합류한 대열은 의회 건물 앞 신타그마 광장을 둘러쌌다. 경찰은 시위를 해산시키려 최루가스를 뿌리며 시위대를 공격했다.

1주일 후, 새 법안이 두 번째로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지자, 수많은 노동자·청년이 ADEDY의 호소에 응해 신타그마 광장에 다시 모였다.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를 비롯한 많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ADEDY는 “콰르텟” 기술관료들의 정부 건물 진입을 막아 달라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고, 그 결과 기술관료들은 정부와의 일부 협상을 아테네 힐튼 호텔에서 해야만 했다.

### 파업

ADEDY가 호소한 총파업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졌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수많은 작업장에서 투쟁이 터져 나왔다. 아크로폴리스를 경비하는 노동자들이 수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7~8월에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리스 최대의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기업인 ELPA의 노동자들도

행정당국을 점거해 임금 체불에 항의했다. ELPA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전제로 기업을 국유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 최대 TV 방송사 중 하나인 ANT1에서는 기술진 30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기술진 및 기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5일간 방송을 중단했다. 그보다 며칠 전, 아테네의 유력 일간지 <엘레프테로스 티포스>('자유'의 언론)와 <에트노스>('민족')의 노동자 전원이 파업에 돌입했다.

테살로니키 시 당국 공무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신규 채용을 요구하고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항의했다.

항만 노동조합은 최근 발표된 항만 민영화에 항의해 파업을 준비 중이다. 긴축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이 벌써 40도가 넘는, “평온했을” 여름 휴가철에 벌어진 일이다.

경제 투쟁 영역에서만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치 황금새벽당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주도로 시위가 벌어졌다.

수많은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아테네 여러 곳의 공원과 광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며 난민 지위 인정 및 거주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연대하는 운동도 있다.

이런 기층의 압력 때문에 시리아 내 긴장이 심화됐다. 대부분 좌파연대 소속인 의원 40명이 긴축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그 후 25명은 시리자를 탈당해 민중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었다.

좌파연대의 시리자 탈당은 긴축에 맞선 저항에 힘을 더할 수 있기에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민영화, 연금 삭감 등 모든 전선에서 좌파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 이후로도 시리자 중앙위원 52명이 긴축 법안에 항의하며 추가로 사임했다.

### 행동

8월 무더위에도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런 때 노동자 운동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공동 행동을 조직할 좌파다. 항만·공항·국영 전력 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임금과 연금 삭감을 저지하고, 긴축 때문에 병원과 학교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파업과 점거가 계속 벌어지는데 좌파는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크게 나온 이후 이런 공동 행동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시리자의 개혁주의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 노동자 운동과 좌파에게는 총체적인 반자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반자본주의 좌파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연합인 안타르시아는 반자본주의적 전환 강령을 제시했는데 단지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채 전액 탕감, 노동자 통제 하에 은행과 대기업 국유화, 해고 금지, 유로존과 EU 탈퇴는 지금 여기서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고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이다. 치프라스는 “위기를 탈출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런 요구들이야말로 우리의 답변이며, 오늘날 긴축에 맞서 투쟁하는 민중의 무기다.

민중연합은 아직 자신들의 강령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민중연합 소속 저명인사 몇몇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드라크마 화(貨)로 복귀, 은행 국유화, 사유화 중단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말하자면 유로존은 탈퇴하지만 EU에서 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충분한 대안이 못 된다. EU는 악독한 자본가들의 기구다. 긴축과 경제 협박, 인종차별, 제국주의적 개입이 EU의 뺏속들이 배어 있다. EU 자체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는 한, 설령 “우리 측 조건에 맞춰” 유로존을 탈퇴해도 이들을 저지할 수 없다.

어느 계급의 통제 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노동자 통제 요구는 반자본주의적 강령을 위한 꽃 장식이 아니다. 제대로 대안을 구현하려면 병원 노동자들이 치료와 투약 과정을 주관하고, 은행 노동자들이 개입해서 돈이 투기가 아니라 연금에 쓰이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국영 방송국 ERT 노동자들은 노동자 통제가 공상이 아님을 보여 줬다. 날이 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은 점점 더 그런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치프라스는 유럽 모든 나라의 정부가 그리스에 맞섰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7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긴축 반대 지지 시위에 나선 수백만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긴축 반대를 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대한 국제 연대 물결과 각국에서 벌어지는 긴축에 맞선 파업에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 있는 희망과 힘, 영감을 얻는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9월호 / 번역 김준호

156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 대학을 기업의 필요에 종속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 청년유니온 비판  
정규직의 양보가 청년 실업의  
대안일까?

www.wspaper.org



8·25 합의 이후 박근혜

#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김영익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헨안면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켜봤다. 미국은 박근혜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물론 탐탁지 않아 했지만, 박근혜는 참석을 결정했다. 그래서 박근혜는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가 됐다.

8·25 합의나 이번 중국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균형 외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이런 상황을 국내에서 “노동개혁” 등 임기 후반기의 목표를 추진할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얻은 외교적 ‘성과’들은 모두 불안정한 토대 위에 쌓아 놓은 풀이어서 제한적 효과만을 낼 공산이 크다. (관련 기사: “남북 합의 이후 — 불안정을 낳는 정치적 지뢰는 여전히 남아 있다”(《노동자 연대》 155호))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서 드러나듯이,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갈수록 중요해져 온 현실을 무시하기 힘들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신경을 쓰는 또 다른 요인이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동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를 한·중 관계보다 더 강조해 왔다. 여기에는 당연히 중국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전승절 참석만으로도 박근혜는 미국과 일본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 한다.

## 균형점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간 경쟁과 갈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균형외교”를 펼 여지는 크게 제약돼 있다. <조선일보>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의 틀을 넓혀가고 일본 등 주변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난제”라고 걱정한다. 이 난제를 풀 절묘한 균형점이 어디냐를 두고 한국 지배계급 내의 견해

차도 크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김정은도 이에 대한 일정한 반대급부(경제 지원, 제재 완화 등)를 기대하면서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8·25 합의 직후에도 한미 양군이 북한을 겨냥한 통합 화력훈련을 진행한 데다, ‘빠리’ 살포만으로도 긴장이 다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남북 관계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크다.

게다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북한을 뺀 채) 하겠다고 밝힌 박근혜의 발언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별 근

거 없이 ‘북한 봉기론’에 경도돼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 제재와 무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달리 “북한의 전향적 조치(즉, 북한의 선의 양보)”를 전제로 한 6자회담 재개를 애기했다.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 계속 악재가 될 것이다. 예컨대 9월 말에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

제가 다시 논의될 개연성이 있는데, 그리 되면 심중팔구 한국 정부는 서방 강대국들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온 북한이 머지않아 로켓을 발사할 공산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8·25 합의로 당분간 유화 국면이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취약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다시 바뀔 위험성이 다분하다.

## 국내 통치 전략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당분간 8·25 합의와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준 이점을 국내 통치에서 한껏 이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아마도 박근혜는 10월 말 이산가족 상봉과 그 후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도 국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미 8·25 합의 다음 날 박근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거 청와대로 불러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분야 개혁” 추진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역대 정부들은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불만이 커질 때 때때로 남북 관계를 이용해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예컨대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표방하고 1991년 북한과의 유엔 동시 가입을 추진했는데, 당시 노태우 정부 하 최대 항위 시위였던 ‘5월 분신정국’을 진정시키는데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내 통치 전략으로 대북 유화 제스처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갈등이 점증해 오면서 한반도의 불안정과 모순도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은 박근혜의 대북 정책 등이 갖는 한계와 위험성을 폭로하고 경고하면서 “노동개혁” 등 박근혜의 반동적인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 삼성은 야비한 인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조명지

9월 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요구해 온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정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내팽개치려는 것이다.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은 수년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온갖 탄압과 회유, 협박,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것이다.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은 삼성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보상 절차가 오래 걸린다면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이하 가대위)이 조정권고안의 보상수준이 낮

다는 불만을 표하자 가대위를 회유해 조정을 중단시키고 직접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가대위가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더 높이자고 요구하자, 삼성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것이다. 가대위 간사는 이에 항의해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회에는 피해자의 산재 인정을 부정했던 전력이 있는 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것만 봐도 보상위원회에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하다.

조정권고안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는 의의가 있지만, 보상수준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다. 삼성은

이를 악용해 인간책을 쓴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대위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이유로 반올림을 배제하고 삼성과의 별도 교섭을 선택한 것은 삼성의 인간질에 놀아나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위험한 방법이다. 게다가 처음에 조정권고안을 지지했던 반올림도 그 뒤 조정위원회에 보상 수준을 높이라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독단적인 보상위원회 발족은 삼성이 가대위 여섯 가족에게조차 충분한 보상을 할 의향이 없고,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치위버리기 위해 분열을 이용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보여 줬다.

그동안에도 삼성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인간힘을 써 왔다. ‘우선 보상’ 운운하며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을 시도하고, 반올림을 ‘외부단체’라고 매도하면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을 이간질했다. 또,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올림을 어떻게든 교섭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지난 8년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활동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삼성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삼성은 지난해 직접 사과하고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가대위가 반올림과 함께 더 넓은 사회적 지지 속에서 삼성에 맞설 때 진정한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첫째, 정부는 성과급평가(임금)와 근무성적평가(승진)를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를 도입하려 한다. 인사와 보수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 통제를 강화하고 교사들 간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다. 그리고 성과급 차등 폭을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려 차등액을 대폭 늘리려 한다. 이런 성과급 확대는 호봉제를 축소해 직무성과급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실, 교사 노동의 성과를 개인별로 계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사들의 협력을 방해할 것이고, 평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들(가령, 수업 준비)이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높이려 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를 훈령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원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교원업적평가와 통합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저성과자 연수를 교육부가 표준화해 통제하려 한다. 애초 교원평가가 저성과자를 수



성과급 확대는 관리자 통제를 강화하고 교사들 간 경쟁을 부추긴다. 2011년 5월 수도권 교육 주체 결의대회.

아내 퇴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강제연수제도를 장차 교원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긴축

(2) 정부는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을 강화하려 한다. 박근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더 한층 강화하고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 현행 검정제도 국가의 집필 기준 제시 등으로 국가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마당에(교과서 발행 체

제는 궁극으로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아예 국정제로 후퇴시켜 단일한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강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사회 교과에는 ‘기업가 생애 교육’을 포함시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해 미래의 노동력에게 자본과 국가에 순종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한다.

또한, 초등수업시수를 늘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키우고, 진로 교육을 강조하며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을 추진하려 한다. 대학도 산업 수요에 맞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한다.

(3)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려 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1조 5천억 원이

나 삭감됐는데,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2조 원까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실제 초중고 예산은 그만큼 더 줄었다. ‘학교 수’와 ‘학급 수’ 중심으로 짜여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급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으려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강원, 전남, 경북은 초등학교의 절반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원 명퇴를 늘려 신규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올해 신규 교사 충원을 대폭 감축한 것을 보면 명퇴는 ‘양창’, 정규 교사 채용은 ‘절감’일 공산이 크다. 앞으로 2년간 5백 명의 시

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발표해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9월 18일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4)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전교조다. 그래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박근혜 정권의 교육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8월 29일 대의원대회에서 9월 19일 교사·공무원 결의대회, 활동가 연가 투쟁,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결정했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9월 19일 결의대회가 하반기 총력 투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참가를 조직하자.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4단계인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을 추가해, 이들에게는 기존 최상위 등급에 지급하던 성과급의 1.5배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성과급 격차를 더 벌려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5급 속진임용제, 발탁 승진, 특별 승진 등 성과 중심 승진 체계도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겠다고까지 한다. 정부는 성과

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생겨났는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은 임금피크제를 2017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퇴직 후 시간제 공무원으로의 재고용을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강화와 그에 따른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연공급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나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도 “임금 결정 기준으로서 연공급의 연공성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

고 평균 임금을 낮추며 정부의 임금 결정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강화되면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리 되면 극소수는 임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에 맞서는 것은 임금 삭감에 맞서는 것이다.

## 임금 삭감

정부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서 다루려 한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협의기구가 … 보수 인상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곧이어 정부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결정해 버렸다.

공무원연금 양보를 받아내려 할 때는 협의기구에서 노동조합과 “개선” 방

안을 논의할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임금체계 “개악” 방안을 논의하자는 꼴이다.

따라서 노조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협의기구 참여(또는 활용)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가능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때, 이충재 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타협기구(실무기구 포함)에 참가했지만 결국 양보만 강요당하고 투쟁 기회를 놓친 경험을 돌아봐야 한다.

이 점에서 공무원노조 비대위가 임금피크제, 성과급 확대와 퇴출제 반대 등 10대 요구를 내걸고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같은 날 전교조도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임금피크제 저지, 법외노조 저지 등을 내걸고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각자 자신들의 현안 쟁점으로 집회를 한 후 함께 모여서 “공무원·교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의 임금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하기로 한 것도 뜻깊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되도록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조 내 일부 활동가들은, 연금 투쟁 패배 후유증도 있고 8기 지도부 선거 시기이기도 해서 하반기 투쟁 조직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미래 임금(연금)을 빼앗고는 성과급 확대 등으로 현재 임금까지 빼앗겠다는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8기 지도부 선거와 임금 삭감 및 노동조건 개악에 맞선 투쟁을 함께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통해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연금 개악에 이어 임금까지 삭감하려는 정부에 맞서 9월 19일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자.



##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뒤흔드는 안 된다

장호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1년 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먹튀할 심산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는 아예 공적연금 ‘강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의 반대급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 약속을 하려 하자,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를 가로막은 바 있다. 재정 절감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 안정성 논리를 내세운 정부의 복지 삭감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한편, 자본가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돌아간다. 일체의 복지 삭감 시도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기업주·부자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다.

박근혜는 오히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들에 맞서 공적연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 계급 일부에 기반을 둔 당인 데다가 연금 등 복지 삭감에 관한 대부분의 전제를 새누리당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집권 시절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했고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도 도와준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자신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기껏해야 소득대체율을 절끔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기구 설치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을 명시할 것인지 말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연합 강기정은 “보험료를 인상 문제는 여야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새정치연합의 전신)은 보험료를 12.9퍼센트로(현행 9퍼센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노후 빈곤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보험료를 일부 인상해서라도 연금을 인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측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니 결국 나중에 받는 돈을 생각하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법하다. 실제로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미끼였을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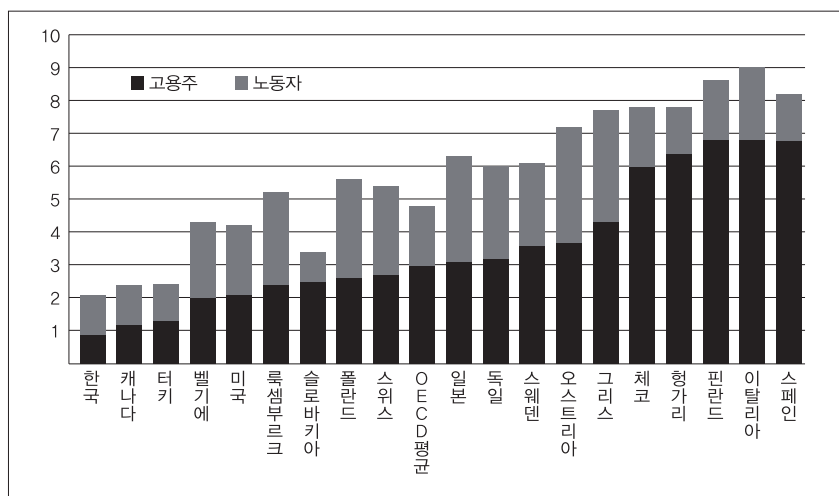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들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연금 기여 비율. 한국 기업주들의 기여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단위 GDP 대비 퍼센트)

기업주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주류 언론들이 ‘보험료 폭탄’ 논리를 펴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기업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민간연금에는 없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을 높이 평가하며 ‘더 낼수록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 저축계정 도입안

그러나 단지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거나 자기기만이다.

먼저 제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여야 의원 28명은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들만 보험료를 더 내는 저축계정 도입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나마 더 받고 싶은 사람만 더 내라는 식이어서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다. 이런 식이면 개인연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연금 인상이 미래에 대한 ‘약속’인 반면, 보험료 인상은 당장 실질 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류 정치인들의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를 올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완전히 신

뢰할 수는 없지만, 지난 5월 한국궐련이 실시한 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4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런 반대가 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여기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 3퍼센트, 소득대체율 70퍼센트’였던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9퍼센트, 소득대체율 40퍼센트’로 크게 후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보험료를 올려놓고 또 소득대체율을 깎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퍼센트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2028년까지 처음의 두 배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었는데도 이행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는 아예 이를 폐기해 버렸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 연금의 수익률도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또 삭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7세까지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보험료 인상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

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 기업주들의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연금 소득대체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그림 1). 또,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로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일이 실현되려면 노동자들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 연금투쟁이 불붙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사회적기구처럼 애당초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기구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데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잠재력을 갉아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듯하다. 이들은 지난 5월 사회적기구 설치를 약속하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과시키려 한 여야 합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부 수용해서라도 사회적기구를 통해 다른 공적연금을 강화하면 이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연대와 노동조합 내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비판한 것처럼,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잘해야 한 달 정도 운영되는 동안 보험료 인상 같은 개악안을 놓고 줄다리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삭감이 쓸쓸하지만 공적연금 전체를 개선하려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한발 물러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여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먹튀’를 당할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무척 큰데도 사회적기구라는 ‘어음’을 받고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이라는 ‘현찰’을 내준 데 있다.

### 민주노총 내 논의

한편, 민주노총은 중집 회의에서 격론 끝에 사회적기구 참여를 결정했다. 격론이 벌어진 것은 사회적기구가 부도난 ‘어음’이 될 공산이 점점 커지고,

설령 가동돼도 개악을 둘러싼 논의가 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민주노총은 사회적기구 참여를 결정한 후 교섭원칙으로 “보험료 인상 및 수급연령 상향 등 국민연금 개악이 병행될 경우” 즉각 탈퇴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기구가 부도난 어음이 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그렇게 되도록 방지하지 않겠다는 심정에서 오히려 사회적기구에 더 매달리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내 일각에서 정부 부담을 늘린다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험료 인상” 등 개악이 병행될 시 즉각 탈퇴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이 더 후퇴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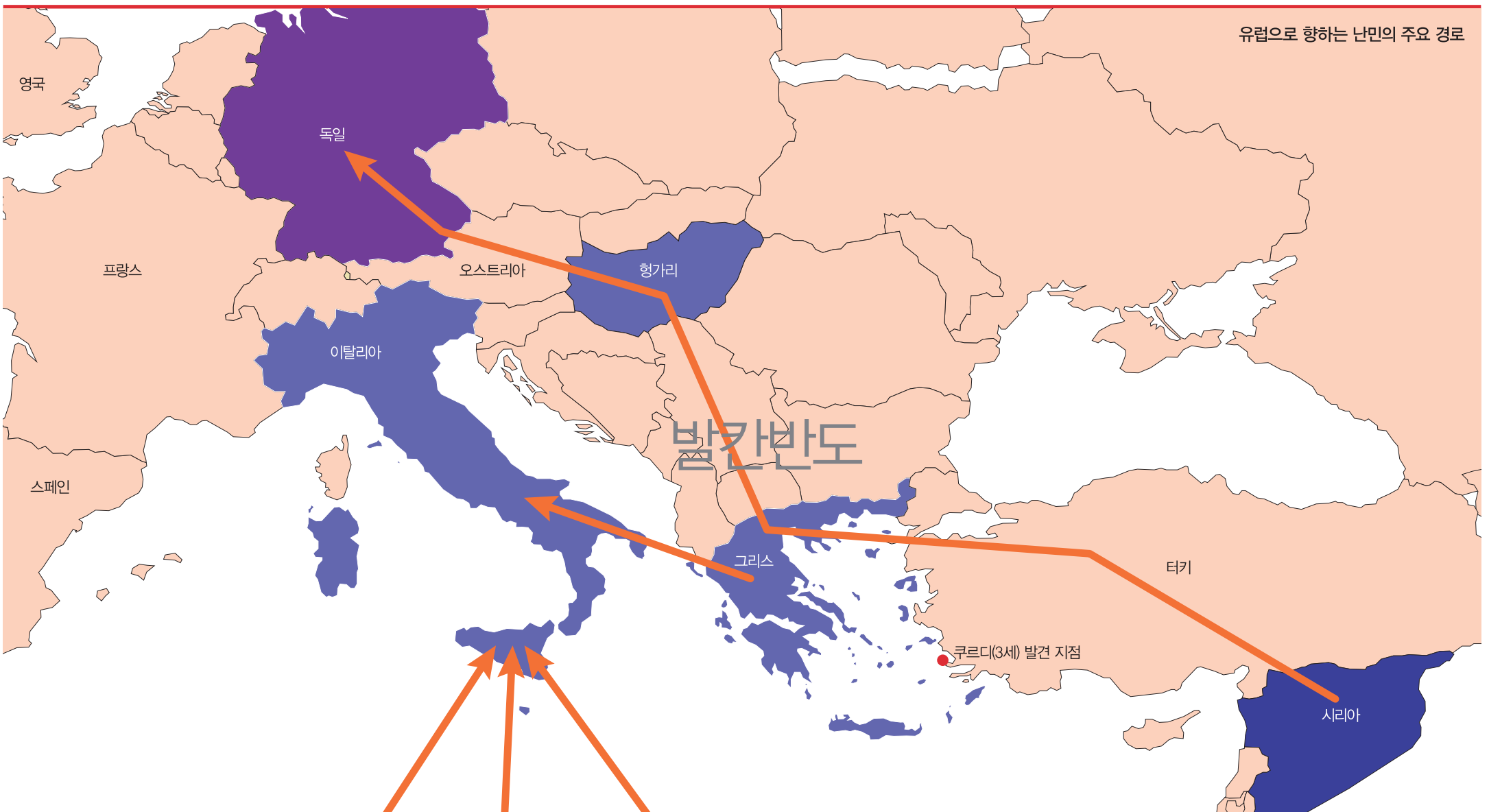
그러나 민주노총이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이는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위험도 있다.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방안을 결코 열어뒤흔드는 안 된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안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의 ‘대타협기구’와 달리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망일 뿐 사실도 아니고 당면한 투쟁 과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다.

특히, ‘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기구 운영에 매달리는 것은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에 맞서 싸우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기구에서 실컷 논의해도 결정은 결국 국회 특위에서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부도난 ‘어음’이 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구 합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험료 인상 같은 양보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당면 투쟁 과제를 조직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김종환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2일, 터키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3살배기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들의 투쟁이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줬고 각국에서 대중적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정부의 난민 혐오로 악명 높은 헝가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독일 길목에 있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백 대의 차량과 버스를 동원해 헝가리에서 난민들을 실어 날랐고 철도 노동자들은 '난민 열차' 운행을 위해서라면 특별 연장근무도 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프랑스·영국에서도 난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와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유럽의 지배자들은 더는 입발림만으로는 난민 문제를 물어둘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9일 난민 대책을 발표했고 다음날 유럽의회는 이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이주인 혐오 입장을 표명해 온 지배자들은 주권 침해라며 벌써부터 입방정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난민 대책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난민 문제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난민을 더 가혹하게 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 1. 난민 대부분을 외면하는 문제

난민 대책의 첫 골자는 헝가리·그리스·이탈리아에 있는 난민을 다른 나라들에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세 나라는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주요 나라들이다.

그런데 할당하겠다는 인원 규모가 턱없이 작다. 유럽연합은 난민 대책을 발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올해 들어서만 이 세 나라로 유입된 난민이 47만 명이고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도 16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국경 봉쇄

별도의 대책이 발표되지 않는 한, 그 밖의 난민들은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그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 사실상 국경 봉쇄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대중이 난민을 환영하고 심지어 정부의 처벌 위협에도 난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돕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게다가 이번 할당 제도는 모든 난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리아·이라크·에리트레아(동아프리카의 빈국) 3개국 출신 난민에만 적용된다(전 분기 평균 난민 인정률 75퍼센트 이상인 출신자들).

유럽을 찾는 난민 중 시리아인 다음으로 수가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을 포함해 다른 나라 난민들은 '어차피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작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됐다. (유럽연합의 난민 인정률은 평균 45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리아·이라크·에리트레아 3개국 난민들은 온전히 혜택을 누릴까? 전혀 아니다.

유럽연합 산하 기관인 유럽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이 3개국 출신의 난민 신청자는 18만 명이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난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출신의 난민조차 서로 할당량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운 좋게 할당량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된 나라로 강제 이주되고 보통의 유럽인들과는 달리 그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 자신에게 배정된 나라에서 벗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근본적으로 이런 강제 할당 제도는 난민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주한 사람이라는 점을 무시한다.

### 독일의 부담 덜어주기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독일의 부담

을 대폭 줄여 주기 위한 것이다. 유럽을 찾는 난민의 3분의 1은 일자리 사정이 그나마 괜찮은 독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에게 부여된 난민 수용 할당량은 4만 2백6명이다. 이 규모는 지난해 독일에 난민 신청한 시리아·이라크·에리트레아 사람들(6만 3천여 명)의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다. 게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난민 유입이 훨씬 더 많을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다.

결국 독일은 지난해보다 더 적은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내 책임을 다 했으니 다른 나라로 가시오' 하면서 절반 이상의 난민 신청을 거절하고, 독일로 향하는 난민을 헝가리·그리스·이탈리아에 가둘 명분까지 얻었다.

## 2. 극단적인 선별수용을 부추기는 문제

이번 난민 대책의 둘째 골자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몇몇 나라를 '난민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해서 그 나라 출신 국민들의 난민 신청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다. 발칸반도 나라들과 터키를 '충분히 안전한 나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이미 발칸반도 나라들을 '충분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해 독일을 찾은 난민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시리아인이 아니라 발칸반도 빈국들의 난민들이었다(4만 명).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도 채 안 된다(독일 내 전체 평균은 42퍼센트). 독일 정부가 발칸반도의 나라들을 '충분히 안전한 나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선별수용 정책이다.

과연 발칸반도 출신의 난민들은 '충분히 안전한'데 왜 맨날 길 잃은 사람들로 취급당하는지? 전혀 아니다.

발칸반도 출신 난민의 상당수는 로마인(집시)인데, 그들은 발칸반도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받아서 전기·난방·상하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빈민가에 살아야 하고, 교육·보건 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 유네스코의 발

표를 보면 로마인 영아는 첫해를 넘겨 생존할 확률이 다른 아이들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이 '정치적 난민'만 인정하고 '경제 난민'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51년 난민 협약은 당시 서방 정치인들이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억압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의 망명을 체제 우월성을 홍보할 명분으로 삼으려고 고안됐다.

그러나 난민 발생은 정치적 억압뿐 아니라 경제 붕괴, 전쟁, 환경 재난 등 다양한 위기가 결합된 결과다. 그래서 난민 구조 활동가들은 "현실에는 순수

한 '경제 난민'도 '정치적 난민'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선별수용 정책은 지배자들이 상당수 난민을 '가짜 난민', '우리의 복지를 탐하는 외국인'으로 매도하고 인종차별을 유포하는 데 이용된다.

실제로 독일의 주류 정치인들은 난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을 대놓고 쏟아내면서 극우 단체들이 성장할 시궁창을 조성했다.

이런 정책을 유럽연합으로 일괄 적용하면 유럽 전역에서 선별수용과, 일부 국가 출신 난민을 속죄양 삼는 인종차별을 부추길 것이다.



## 3. 단속 강화는 난민 유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유럽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밀입국 알선 단체”(trafficker, 여러 언론 매체들은 이 단어를 “인신매매 조직”이라고 고약하게 오역한다) 소탕을 운운하며 단속을 강화해 왔다.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알선 단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난민선 침몰로 수많은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유럽연합은 (인명구조가 아니라) 알선 단체 소탕을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단속 강화는 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한다.

유럽연합은 ‘불법 체류자’를 승객에 포함시킨 해운·항공사에 벌금을 물리고, 난민 발생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요구한다. 그런데 황급하게 고향을 떠나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발급 절차가 몇 주나 걸리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유럽연합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해운·항공사는 자연스레 난민 신청자 탑승을 꺼리게 된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막혀 있고 단속까지 피하려다 보니 난민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터무니없는 비용을 내야 한다. 쿠르디 가족은 터키에서 겨우 그리스 해안까지 가는 배삯으로 1인당 2천 유로(약 2백70만원)를 내야 했다. 만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면 그 돈의 10분의 1로 터키에서 독일까지 직행 항공권을 살 수 있었다.

단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은 난민의 안전이 아니라 난민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단속이 강화되면 난민을 돕는 활동가들과 평범한 시민들을 밀입국 알선 혐의로 처벌하기도 쉬워진다.

## 4. 물리력을 동원해 이주민을 쫓아내는 문제

유럽연합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난민선을 수색, 송환하거나 국경을 봉쇄할 뿐 (적어도 내놓고) 난민을 강제 추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연합은 2014년에 ‘비정상 이주민’으로 분류해 떠나

라고 명령 받은 사람 중 실제로 떠난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면서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쫓아낼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난민의 본국송환은 아니라고 하지만 ‘비정상 이주민’과 난민(특히 난민 신청이 거

부된)의 경계는 아주 흐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난민 유입을 막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악명 높은 유럽연합 차원의 출입국 단속반 프론틱스를 더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비극의 책임 제국주의 전쟁은 중동 민중의 삶을 파괴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난민촌.

## 위 문제들의 해결책은 이주의 자유의 보장

유럽의 각국 정부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유입에는 ‘적당한 한계선’이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와 경제가 불안해진다고 말한다. ‘지금도 일자리와 복지, 공공 시설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1천2백만 시리아 난민 중 시리아 혁명이 발발한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유럽을 찾은 시리아인은 (누적 수치로) 22만 명밖에 안 된다. 압도 다수는 시리아 내 다른 지역이나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 중동에 남는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들이 전체 시리아 난민의 고작 1.8퍼센트를 놓고 이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다.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유럽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독일은 2013년 난민 수용 비용으로 총 15억 유로(2조 원)를 지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군대와 금융 관련 지출로는 각각 360억 유로(48조 원)와 620억 유로(83조 원)를 썼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우선순위인 것이다. 그래서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이 얼마 안 되는 이주민과 난민을 수용할 자원과 여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일침을 놔다.

난민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이주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과 전 세계에서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열악해진 것은 난민 때문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부자와 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는 대신 투자를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낮아서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어느 사회든 복지와 공공서비스는 노동의 산물이다. 따라서 노동인구가 많을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의 대도시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난민·이주민 통제는 ‘세상에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과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퍼뜨려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그러나 난민과 ‘본토’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유럽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머나먼 유럽까지 찾아오는 난민 2명 중 1명은 18~34세다. 이 난민들은 ‘본토’ 노동자들과 같은 것, 바로 일자리와 복지를 원한다. 두 집단 모두 일자리와 복지를 없애는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연대의 기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이주 규제에 반대하고, 지금 평범한 시민들이 난민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난민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은 유럽연합에 대한 좌파적 대안 건설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독일 지배자들도 다르지 않다

언론(특히 한국 언론)은 메르켈 등 독일 정치인들이 난민에 관대하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언론의 가장 흔한 왜곡은 난민 신청자를 마치 당국에 의해 최종 인정된 난민처럼 보도하는 것이다. “독일, 난민 80만 명 수용” 식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80만 명은 독일로 향한 난민 신청자들을 추산한 것이다. 반면 독일의 심사 후 난민 인정률은 유럽연합 평균(4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서 지적했듯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칸반도 출신자에게는 1퍼센트도 허락하지 않는다.

### 10명 중 6명

그래서 독일을 찾은 난민 10명 중 6명은 난민 신청이 거부됐고 사실상 추방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상반기에 독일 정부는 약 8천2백 명의 난민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퍼센트 늘어난 것이다.

난민 신청이 많은 이유도 정부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독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인구를 감안하면, 독일이 접수한 난민 신청

률은 유럽 28개국 중 10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난민 대책으로 독일은 결국 자국으로 향했을 시리아·이라크·에리트레아 난민에 대한 책임을 다른 나라로 떠넘길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는 더 많은 난민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가장 주된 좌파인 ‘마르크스 21’의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또는 독일로 오는 길목에 있는 나라의 독일 대사관들은 한사코 난민 신청을 받지 않고 유럽연합까지 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독일은 거의 모든 난민 발생 국가에 대해 유럽연합 진입 시 비자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주도해 난민들의 합법적 입국 경로를 사실상 차단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디링케의 또 다른 활동가는 “8월 말~9월 초에 독일로 들어온 난민 수천 명에게 실제로 체류가 허락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면서 “지금 독일 지배계급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난민을 환영하고 나서자 체면치레를 할 방안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제국주의: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

최근 유럽 난민 문제가 급속히 부상한 것은 유럽을 찾은 난민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4년 한해 동안 유럽을 찾은 난민 중에는 시리아인이 가장 많았고(20퍼센트, 12만여 명), 그다음은 아프가니스탄인이었다(4만여 명). 같은 기간, 이라크에서도 2만 명 넘게 왔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나라들을 망친 것은 바로 서방 지배자들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충실히 지원한 제국주의적 중동 정책이다.

서방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현지인들의 처지를 악화시켰고, 특히 이라크에서는 종파 갈등을 부추겼다. (한국 정부도 한때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점령군을 보냈다.) 그 덕분에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가 성장하자 다시금 서방은 IS를 막겠다고 2013년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 미사일을 퍼붓는 동시에, 현지 군대의 손을 빌리려고 시

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것에 눈감고 있다.

2013년 이후 서방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만 헤아려도 1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리아에서는 서방, 정부군, IS의 경쟁적인 파괴 행위 때문에 양대 도시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수도 시설이 파괴돼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창궐할 위험마저 있다(9월 2일, 국제 적십자).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고 2013년 이라크·시리아 공습에 반대한 세계 반전 운동의 경고가 유효했던 것이다. ‘인도주의적’ 전쟁이나 공습이란 있을 수 없고 제국주의적 전쟁은 오직 재앙만 낳을 뿐이며, 오늘날 유럽 난민 사태가 그 일부인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 지배자들은 성찰은커녕 최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리아 공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는 질병의 원인을 처방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 한국 정부는 더 냉혹하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인도적 체류허가까지 포함해서 11.6퍼센트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평균(45퍼센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평균(30퍼센트)과 비교해도 형편없이 낮다.

한국은 2013년 전까지 난민에 관한 법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선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역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2013년에서야 제정된 난민법은 입국 단계에서 난민 신청을 접수할지 말지까지 심사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수단 출신의 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 자체가 거부돼 공항 구금 시설에 5개월이 넘도록 구금당했고 변호인 접견마저 허락받지 못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외국인보호소가 난민 신청자들을 사실상 구금한다’고 비판했다.

2010~13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 26명의 평균 구금기간은 무려 3백14일이었다.

시리아 난민 4백77명을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했지만 취업 허가 외에 건강보험이나 생계 지원 등은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G-1)비자 뿐인 이들을 설향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런 나라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김어진 국립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9월 18일, 여의도에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에 결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최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9월 3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항의해, 일곱 교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첫 집회다.

비대위의 핵심 요구는 이렇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 것,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 국립대 사영화 의도, 강사법 도입 등의 각종 무리한 대학 정책과 관행을 폐지할 것”.

‘총장직선제 수호’를 외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이 분노가 모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부당한 경쟁을 강요해 온 탓에 이미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분노는 커져이 쌓여 왔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쟁점을 단지 총장 선출 방식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국립대학에 강요해 왔다. 국립대 민영화가 지지부진하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운영체계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한다며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사진 출처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갈수록 기업과 국가권력의 독과점 수단이 되는 대학 8월 17일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해 투신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분향소.

총장 간선제 전환 등을 추진했다.

두 정부는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 사업과 연계해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대학 당국을 압박해 왔다. ‘교육역량평가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 등의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교수신문> 8월 25일치)

## 교육 불평등

많은 국립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거나

줄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직선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고, 버티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거나 평가점수를 낮게 줘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는 채찍을 가했다. 실제로 부산대, 경북대, 목포대, 공주대, 방송대 등이 불이익을 당했다. 부산대가 끝까지 버텼다.

결국 모든 국립대학이 굴복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교수들 사이에는 참담함과 자조가 팽배했다. 이런 상황

에서 고故 고현철 교수가 자신을 희생했고 이를 계기로 사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대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각종 평가와 연계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모두 평가 항목과 방식에 매달려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평가로 교육도, 연구도 행정도 모두 단기적인 평가 위주로 바뀌었다(<교수신문> 2015년 8월 25일치). 연구는 없고 연구 계획서와 알맹이 없는 연구 결과 보고서만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와 돈을 쥐고 있는 연구재

단의 계량적인 연구 실적 평가 방식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른바 일류대학에 돈을 몰아주는 현재의 평가 및 지원 방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대학은 갈수록 공공지식의 주체이자 지혜의 샘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권력의 독과점 수단이 되고 있다(<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알렙). 그 결과 교육 불평등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수들 사이에서 ‘각성하고 당당해지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9월 18일 집회가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초등학교 관련 단과 대학·학과를 아우르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시간제 교사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초등에서 1천5백여 명, 중등에서 8백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박근혜)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새누리당”이라더니 정작 국가의 고용 몫인 교원 임용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다. 예비 교사 대학생들은 격화될 임용고시 경쟁률과 길어질 임용 준비 기간 때문에 실업 위협에 처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효율성’을 위해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에도 교원 증원 축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012년 기준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각각 21.3명, 23.5명)보다 훨씬 많다. 이 때문에 박근혜대 대선 후보 시절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원 10만여 명이 충원돼야 한다.

교사 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과 현직 교사, 수업을 받는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원 수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30명 규모인 시간제 교사를 5백 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해소 대책)

## 시간제 교사

그러나 ‘청년 실업 해결사’를 자처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

다. 시간제 교사는 수요가 없는 경우 전일제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일부 교과목 교사들은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승진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못 받는다. 시간제 교사 제도의 확대는 ‘국가 주도의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교대련은 지난해에도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반대하며 1만여 명이 동맹휴업 집회를 벌였다. 당시 교대련 투쟁으로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 여부를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재논의하겠다고 후퇴했다. 물론, 현재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런 후퇴가 잠깐의 시간 별기일 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교대련이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행동

에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는 공교육비를 대폭 늘려 정규 교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재원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이 정부에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그 밖의 청년, 학생들에게도 중요하다. 또 교대련의 요구는 정규 교사 노동자들(특히 전교조)의 시간제 교사제 반대 투쟁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교대련의 정당한 요구와 동맹휴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김승주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